



쟁
점
토
론

고등교육평가원 신설, 꼭 필요한가

신재철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신설, 필요한가

I. 머리말

1982년부터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의 향상 및 여건의 개선 즉,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학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의 결과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다.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된 동 법에서 대학 간 자율협

의체인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한 것은 대학평가를 대학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관리 활동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신재철, 2004a, p. 333). 지금까지 실시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 여건의 개선,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교수의 연구활동 촉진, 대학행정과 학사조직의 개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체제 확립 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최한선 외, 2000, p. 60).

이와 같이 20년이 넘는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와 학문영역평가의 경험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에 대하여 일부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평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근본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에 대한 평가의 종류가 너무 많아 대학 구성원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평가기구들이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 즉, 대교협 의 종합평가와 학문분야별 평가 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평가, 그리고 언론사의 평가 등 대학에 대한 평가가 상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평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의 중복 평가로 인하여 개별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학사업무에 지장까지 초래하고 있다.

둘째,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원 형태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자율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신재철 외, 2004). 그러나 대교협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와는 달리 어떠한 형태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들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준비할 때 외형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에 지나친 시간 소모, 평가준비를 위한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지장 초래,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 평가로 인한 전국 대학의 획일화 가능성 등의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평가체제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p. 6).

첫째, 평가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의하면 기존의 대학평가가 대학의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평가와 투입 위주의 정량평가로 인하여 평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수준 이하의 평가기준으로 국제적 통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에 의한 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문제가 되며, 전문성을 겸비한 체계적 평가체제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분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평가체제라는 것이다.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민간기구, 정부 등이 분산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5-43호)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여 운영해야만 대학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교육부가 신설하려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하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고등교육평가원을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해야만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 고등교육평가원의 신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Ⅱ. 고등교육평가원의 신설을 재고해야 할 이유

1. 대학의 자율성 훼손

대학의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자율성은 교수 개인의 학문의 자유와 기관의 자율성을 포함한다. 교수 개인의 학문의 자유는 연구, 교수(teaching), 발표, 학습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교수의 단순한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직무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수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고해야 하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교수 개인의 학문의 자유도 책임을 수반한다. 기관의 자율성은 대학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조직의 자율성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다(신재철, 1995, p. 12). 여기서 기관(대학)의 자율성은 교수 개개인에게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은 대학의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지식기반사회란 창조적 지식의 창출, 확산, 공유, 활용이 일반화되는 사회로서 지식과 정보가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말한다(신재철, 2000, p. 8).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란 컴퓨터, 전자기기, 전기 통신 기술 등의 혁명의 결과로 형성된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 등 정보산업의 부

가가치가 국민총생산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유하는 사회이다. 또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품의 원가 점유율에 있어서 노동의 생산성보다는 지식 노동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신재철, 1997, p. 31). 따라서 Peter Drucker가 말한 것처럼 현대 사회는 노동집약도, 재로집약도, 에너지집약도 아닌 지식집약의 산업시대라는 것이다. 즉, 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두뇌가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는 정보 또는 지식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말해 준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확산시키며, 인간의 두뇌를 계발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관이다. 지식의 생산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한 학문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였다(오욱환, 2003, p. 320). 상상력과 창의력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연구와 연구결과의 발표는 자율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교수가 소속한 대학의 자율성이 확립되어 있을 때에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빼앗아 갔다. 이는 당시 일부 대학들이 학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시키는 등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는 오랫동안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심지어 학생정원이나 학생의 등록금 책정까지도 직·간접적으

로 간섭과 통제를 해왔고, 5·31 교육개혁방안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는 당근(재정 지원)으로 대학운영에 간섭하고 있다. 이에 길들여진 우리 대학들은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아직도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부에서 장·차관 또는 고위 관료직을 역임한 인물을 대학총장으로 선임하거나 선호하는 경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신재철, 2004b, p. 114).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설립한 고등교육평가원이 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의 자율성은 기대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평가를 통하여 대학에 대하여 차등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왔다. 특히 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되는 대학정책 즉, 대학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대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학 자체의 발전 방향이나 특성화와는 관계없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기준이나 정부의 의도에 따라 대학개혁이나 장기발전계획 또는 경영계획을 수립·실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식으로 인한 대학의 획일화 즉, 정부가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대학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을 특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정지원의 편중으로 대학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신현석, 2003, p. 92, 재인용),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고등교육평가원에 의한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많다. 이는 곧 창조적 연구활동의 기본전제인 대학의 자율성 훼손으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는 고등교육평가원의 본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문제

교육부가 제안한 '고등교육평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안이라 칭함)'을 제안하면서 제시한 이유를 보면, "...고등교육 평가의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필자 강조)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하는데..."에 언급되었듯이 신설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법률안 제9조 제2항에서 "이사회는 총·학장협회 추천 3인, 경제·사회단체 추천 3인, 정부 추천 3인 등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은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얼핏 보면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 출연에 의해서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될 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심각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안에서 보듯이 이사회에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3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의지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등교육평가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선임을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고,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0조 제3항)고 하였으나 정부가 출연하고 지원하며 정부추천 인사가 이사로 있는 한 총·학장협의회나 경제·사회단체보다 정관제정, 원장선임, 고등교육평가원의 운영이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는 다른 단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작년에 정부는 정부출연 각종 연구기관의 원장을 선임하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개편하고 이사회를 20명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였는데, 이사 20명 중 정부의 차관이 9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공석이 되는 “어떤 연구기관의 원장에는 누가 내정되어 있다”는 항간에 미리 나도는 소문은 나중에 그대로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정부에 의하여 출연되었거나 지원되고 있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원장선임이나 운영에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작용한 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보자. 몇 년 전부터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 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였다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를 믿지 못하고 이들 양성기관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간섭 내지는 개입을 해왔다. 예를 들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교육부가 간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되는 고등교육평가원에도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출연·운영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법률안 제12조 제1항은 “평가원은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기부금, 수수료,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2항에는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원에 출연금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편으로는 평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원의 독립성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간섭과 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까지 제정하여 출연, 설립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아무런 간섭과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이는 사소한 일까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규정을 보아도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즉, “평가원이…수수료 등을 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제12조 제5항과 “평가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4조 제1항은 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통제와 간섭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교육부가 법률안에서 뚜렷이 표명한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매우 의심하게 한다.

3. 국가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정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데에만 약 14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2005. 6)이 제시한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기관의 하부조직 구성 인원을 80명 내외로 잡고 있어 평가원을 관리·유지하는 데에도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운영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실지로 제고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히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차라리 그러한 막대한 재정을 평가원을 신설·운영하는 데에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학평가기관을 재구조화(약 30억 원 소요 추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국내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외국의 대학들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준이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대학교육 환경지표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대학의 재정 상태를 예로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예산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하여 2.7%이고, 정부의 교육예산 중에서 14%가 고등교육예산이며, 순수 국가지원 고등교육의 예산규모는 2004년의 경우 GDP 대비 0.43%에 불과하다. 이는 GDP로 환산한 미국의 7년 전 40.2%와 일본의 22.5% 그리고 영국의 18.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계 평

균 대학교육비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33.7명으로 선진국보다 2~3배 정도가 높다(이현청, 2004, pp. 27~28). 이밖에도 교수 대 학생 비율, 교수들의 연구실적, 대학 도서관의 장서 수,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투자비 비율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국내 대학의 수준에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우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명문대학의 세계적 수준이 순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정부나 언론들은 질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여건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순위에 자리 매김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일지도 모른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의 대학순위를 평가할 때 대학의 여건뿐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실적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연구력은 연구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교수들의 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연구 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수업 부담과 학생 대 교수 비율부터 감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에게 영양을 공급하지도 않고, 왜 몸이 튼튼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

Ⅲ. 맺는 말

그동안 각종 대학평가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많았다. 특히 각종 대학평가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에 대학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고등교육기관들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지 대학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 또는 관리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통제받는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이 창의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대학평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첫째, 정부와는 독립된 '대한민국대학평가위원회(가칭, 이하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조직은 정부,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경제·사회단체 등의 추천에 의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가능한 한 대학평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대학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가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하고, 대학평가의 결과를 인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기존의 대학평가기관과 민간전문평가기관, 또는 학회 등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을 평가하려는 대학평가기관은 대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먼저, 4년제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기관평가) 업무는 그동안 대학평가 업무에 관한 지식과 방법(know-how)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의 자율적 협의체인 대교협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교협 평가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교협의 평가지원부를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확대·개편하여야 대학평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기구는 대학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대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의 학문분야 평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과대학평가인정위원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과 같은 기존의 민간평가기구나 학문분야 평가능력을 갖춘 전문평가단체 또는 학회 등이 대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평가는 그동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여 왔다. 이 협의회 역시 기존의 평가기구를 확대·개편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를 갖추어 대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통제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새로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생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운영하는 평가원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학에 대한 통제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
관 간 유기적인 평가체제의 구축을 통한 기능
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
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5).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를 위한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신재철(1995). 21세기 사회변화와 대학조직의
이념. *고등교육연구*, 7(2), 1-17.
신재철(1997).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방법과 교
육환경의 개선방향. 21세기, 44호(가을호).
광주: 사단법인 광주·전남21세기발전협의
회, 31-38.
신재철(2000).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기능.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체제 모형.
2000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6.
신재철(2004a).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발전: 성
과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2(4), 333-
350.

신재철(2004b).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제. *한국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반성과 과
제*. 제32차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07-130.
신현석(2003).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구상과 전
략. *고등교육연구*, 14(1), 83-116.
신재철·배호순·정영수·정일환·허숙·강병
운·백정하(2004). 제3주기 대학종합평가인
정제의 패러다임 탐색: 목적과 방향.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오욱환(2003).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
과 개혁 방향의 구상. *한국교육*, 30(2), 317-
341.
이현청(2004).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51.

신재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
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
요 경력으로는 전남대학교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한
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연구부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역
임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가치관
비교연구", 『교육행정학과 비판이론』, 『교육행정학 연구의 최근
동향』, 『교원의 의식개혁』 등이 있다.